

가자 평화 구상 이후 중동 정세
김은비(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부교수)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권보람(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권보람(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와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당성 확보
- 둘째, 조건에 기초한 전략권 전환 계획의 추진을 위한 한미의 구체적 협력 절차를 명시하고, 한국의 필수 능력 획득을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셋째, 주한미군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평화를 위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주한미군의 전력과 태세 수준의 지속 유지 공약
- 넷째,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상징하는 한미 간 조선 및 유지, 보수 및 정비(MRO) 협력 구체화
- 금번 SCM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관세 협상과 맞물린 재협상의 여지가 있고, 동맹간 물질적 비용 분담과 역할분담 차원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토대로 확고한 대한반도 방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수행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결단이 필요

배경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개최했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 협의체로서 양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제57차 SCM에서 한미 국방 당국은 세계 질서 대변동과 국제안보환경의 복합 위기와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안보의 경제화와 경제의 안보화가 동시 진행되면서 미국 대외관계 재조정과 글로벌 동맹체계의 최적화(optimization)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일방주의와 거래주의 협상 방식 때문에 많은 변동성이 예측되는 가운데 관세의 격상 때문에 특히 경제와 경제안보 이슈가 동맹 현안 협상에서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가 조명 받았다. 지난 8월 한국 신정부가 개최한 최초 한미 정상회담과 10월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에 주력하며 동맹 현대화 내용을 포함한 국방현안은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국방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합의 사안에 대한 추측이 많았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앞세워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군사적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남부 국경안보와 서반구 통제를 포괄하는 본토방어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미국 국방전략의 우선순위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었다. 본토방어 중시와 대중국 견제가 마치 이분법적으로 양분되어 전자의 강화가 후자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까 하는 우려가 대내외에서 제기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한미 간 SCM에서 합의된 내용은 미국의 동맹 협력 방식과 발간 예정인 미국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우선순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 안보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글로벌 공공재를 위해 미국이 그동안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해왔기 때문에, 동맹국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원동력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과 함께 동맹국의 비용분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1980년대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동맹을 무임승차하는 불청객으로 경시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재집권 후에는 동맹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을 분리해서 대응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후자의 산업적, 기술적 기반을 통합해 동맹관계를 최적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방비와

주한미군, 전략권 전환, 확장억제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협상에서 군사력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협력이 강조되고 그 범위와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동맹 현대화의 담론이 국방 외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미국이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전력 투사와 자원 낭비를 줄이고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승리해 전 영역에서의 패권(hegemony)이 아닌 수위(primacy)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거나 관료들이 조직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단어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전술적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이래 미국의 주요 국가전략서는 중국을 치명적 군사위협(pacing threat)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합의는 견고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본토방어를 강조하는 데에는 강력한 이민정책과 마약범죄 척결을 강조하는 국내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메리카 대륙 주변부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통해 서반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략경쟁에 유리한 포석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제57차 한미 SCM의 주요 성과와 과제

금년도 SCM 공동성명은 직전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 시트 발표와 연동되어 이례적으로 늦게 발표되었다. 전체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과 성과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할 것과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당성을 확보했다. 한미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재협상하지 않고 국방비를 포괄적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미 정부 간 공약의 연속성을 시연하는 대표적 성과이다. NATO 동맹국에 이어 한국도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력에 부합하는 개별적 국방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하고 글로벌 동맹 체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북한을 비롯한 역내 다영역 안보위협이 상호연계되어

복잡화되고 지역간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위협뿐 아니라 역량을 토대로 한 강력한 방위태세 확립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둘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 계획의 “체계적, 안정적, 능동적” 추진을 위한 한미의 구체적 협력 절차를 명시하고, 조건 충족을 위한 한국의 필수 능력 획득을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기초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 이슈는 동맹과 지역 안보에 대해 갖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 중요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대비와 함께 지속적인 미국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나아가 한국이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의 양적, 질적요건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무엇인지 식별하고, 그것을 미국산 무기 구매뿐 아니라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 나아가 공동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셋째, 주한미군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평화를 위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주한미군의 전력과 태세 수준을 지속 유지할 것을 공약했다. 예년처럼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구성 변화와 역내 역할 확대가 논의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0월 미 상원을 통과한 2026년 회기 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28,500명의 현 수준 유지 권고와 주한미군 관련해서 의회 승인 없는 예산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인 축소 가능성은 낮다. 미국은 연초부터 제이비어 브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가 아닌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억제력을 위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넷째,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상징하는 한미 간 조선 및 유지, 보수 및 정비(MRO) 협력을 구체화했다. 군수지원함과 같은 비전투함정뿐 아니라 전투함정의 MRO 가능성이 명시됨에 따라 한국이 역내 주요 거점으로서 미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고 양국 간 산업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열렸다.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ER) 차원에서 해상, 항공자산뿐 아니라 지상자산에 대한 한국 방산기업의 MRO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미 양국 차원뿐 아니라 역내 유사입장국과의 동맹 간 협력 기회도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한미 군 당국 간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지만, 한미 정상회담 팩트 시트에 명시된 한미동맹 관련 내용과 한반도와 지역 연계 내용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양국 실무자들이 협의해나갈 사안이 적지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협상의 연속”을 고려한다면, 제57차 SCM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세 협상과 맞물린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 미국 국내정치도 변수이다. 지난 11월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의석을 확보한 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이 불필요한 행정명령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함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의석을 차지한다면, 대통령의 결정사항에 대한 재검토 요구와 예산편성 거부 등을 통한 의회 견제가 예상된다. 당론과 별개로 각 주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고려해야 하는 일반 시민의 요구는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한 제어가 가능해질 수 있다.

한미 간 쟁점화 될 수 있는 첫 번째 사안은 동맹 간 물질적 비용분담이다. 한국은 국내법에 기초한 신속한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지만, 중간선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미국은 2030년까지 공약한 2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 대해 직접 관여하려 하거나 재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안보적,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강조하면서 버티는 대미 전략이 필요하다. 제12차 SMA를 개정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이 어떻게 국방비 지출을 늘려갈 계획인지에 대한 대국민 설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사안은 동맹 간 역할분담이다. 한미 정상회담 팩트 시트에는 한미가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2006년 한미가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별개로 전략적 활용 증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한반도 방어 외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해 역내 미국산 무기를 추가 배치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는 미국의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한미 군 당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에 공감한 만큼, 3자 연합훈련과 정보공유의 확대가 요구될 수도 있다. 미중 경쟁 심화 구도 속 중일 관계가 악화되는 국면에서, 한반도 방어에 주력하는 한국군과 대중국 견제에 기여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구분하고, 중일 양국과 개별적인 전략 대화를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내 위협에는 북러 간 밀착에 의한 위협도 상존하기 때문에 중국 담론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공급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가 요구될 것이다. 현재 기술적 가능성과 전략적 필요성, 역내 군비경쟁 심화 야기 등 세부사항에 대한 대내외 이견이 많다. 무엇보다 한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업은 미래의 하드파워(guns)를 위해 현재의 경제적 자원(butter)을 막대하게 투자해야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 설정과 지속 가능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하는 데에는 비확산이라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 우방국을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공공외교도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통해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언급했듯, 이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치는 높다. 한국은 자체 국방력 강화를 토대로 확고한 대한반도 방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수행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결단해야 할 것이다.

권보람은 2013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채플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한미동맹, 미국 외교정책과 국방전략이다.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과 한국 중심의 네트워크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관심이 많다. 대표 저술로는 “美 국방전략의 본토방어 중시 vs. 대중국 견제 기조와 시사점”(KIDA 안보전략 Focus, 2025년 11월), “Revisiting the Drivers and Conditions of South Korea’s Defense Industry Development”(Defence Studies, 2025년 3월), 권보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외교정책결정집단을 중심으로(EAI, 2024년 10월)” 등이 있다 (brkwon@kida.re.kr)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국방부 및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